

## 5.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3년 9월 27일
- 제출자: 대구광역시장(기획조정실장)
- 회부일자: 2023년 10월 4일
- 상정일자: 제30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3년 10월 16일), 원안 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 □ 제안이유

- 지난 7월 10일,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시행으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지자체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시·도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할 의무가 발생함.
- 이에 본 조례안을 마련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市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

## □ 주요내용

-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이며, 그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 1명임.
- 안 제3조에서 제13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3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의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 구분 없이 필요시 개최하도록 했으며 제8조에는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4조와 제15조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시책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보조사업과 포상의 근거가 되는 규정임.
-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1조에는 이전 법률에 근거해 제정한 대구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와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담았음.

###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전문위원 이신희)

#### ○ 제정취지 및 추진배경

-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sup>3)</sup>」 (이하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sup>4)</sup> 시행(‘23.7.10)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됨.

####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③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시·도 지방시대지원단 및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5조(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지방시대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 2.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해당 시·도 지방의회 의원

5. 해당 시·도 공무원 / 6.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시·도 지방시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도 지방시대위원장은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 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도 지역 산업·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관할 시·도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관할 시·도에서 법 제14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할 시·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

6. 관할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도 지방시대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시·도지사는 제7항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이하 “시·도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 정부는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시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합한 ‘특별법’을 제정<sup>5)</sup>하고,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하여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시대 국정과제 및 지역정책과제(지방공약) 이행지원을 총괄토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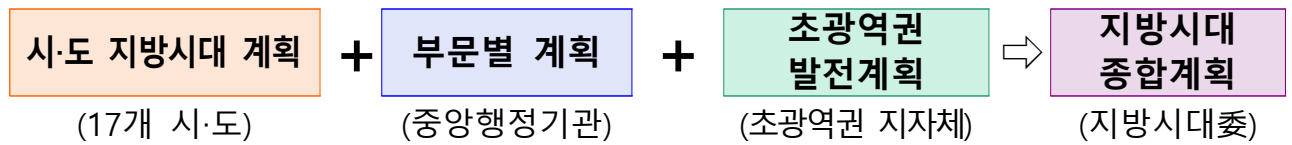
### 【특별법 제정 전후】

시행 전	시행 후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별도로 추진되어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 지방분권-균형발전의 통합적인 추진체계 마련으로 지방소멸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
- 「지방분권법」 + 「국가균형발전법」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 자치분권위원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지방시대위원회 - 자치분권기획단 + 국가균형발전기획단 → 지방시대기획단	
◦ 중앙 주도의 균형발전계획 수립	◦ 시·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하여 <b>상향식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b> 수립
◦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를 유도·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족	◦ 투자기업 등에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 <b>기회발전특구</b> ’ 지정·운영근거 마련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붙임<sup>4</sup>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전후(‘23.7.9.)일부 수정]

- ▶ 또한, 지방정부의 주도성 강화 및 위상 제고를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자체의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에 대한 심의(시·도)와 협의 조정(시·군·구)을 수행토록 하고, 시·도지사가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한 ‘시·도 지방시대 계획’을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음.

5)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이 분산적으로 수행되어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 ▶ 이에 따라 지난 7월 19일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표준 조례안이 지자체로 배포되어, 통합 전 법률 등에 근거한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대구광역시 지역혁신 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 조문별 주요 내용

- ▶ 이 제정 조례안은 본칙 15개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sup>6)</sup>
- ▶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규정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촉진 등 본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음.

### 6) 본 조례안의 조문 체계

조항별	각 조 제목	조항별	각 조 제목
제1조	목적	제9조	의견의 청취 등
제2조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제10조	조사·연구
제3조	위원의 임기	제11조	회의록
제4조	위원의 해촉	제12조	수당 등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13조	운영세칙
제6조	회의	제14조	경비의 지원
제7조	간사	제15조	포상
제8조	분과위원회		

- ▶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음.
- 부위원장 1명을 둔다고 규정한 것은 위원장 유고 또는 제척사  
유 발생 시를 대비한 조치로 보이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를  
총괄하는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 중 위원장은 시장이, 부  
위원장은 위원장이 각각 지명토록 함.
- 또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 기회 부여를  
위해 연임은 1회로 제한함.
- ▶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사유를 열거하였음.
-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와 본인 의  
사에 의한 사퇴, 직무태만·품위손상 등의 사유 발생 시, 시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함.<sup>7)</sup>
- ▶ **안 제5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부위원장의 위원장 직무대행  
에 관해 명시하였고,
- ▶ **안 제6조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  
방시대위원회에서 배포한 표준안과 달리, 정기회와 임시회의 구  
분을 두지 않고 필요시 소집토록 함.

## 7) 위원 해촉사유

특별법 시행령 제59조	안 제4조(위원의 해촉) ※ 표준안과 동일
<p>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li> <li>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li> <li>3.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li> <li>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li> <li>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li> </ol>	<p>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li> <li>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li> <li>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표준안	제출 조례안
<b>제4조(회의)</b>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시·도 지방시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b>제6조(회의)</b>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는 실무여건을 고려하여 형식적인 위원회 회의 개최를 지양하고, 위원회 회의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 한편, 표준안 제4조제3항 회의 소집 안내 및 소집 방법에 관한 조항은 미반영하였는바, 공정하고 민주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회의 고지)<sup>8)</sup>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 ▶ **안 제7조**는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위원회 담당 과장을 간사로 두도록 명시함.
- ▶ **안 제8조**는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검토 등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 ▶ **안 제9조**는 안건 심의를 위해 관계 기관 직원, 전문가 및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 ▶ **안 제10조**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사·연구를

**8)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회의의 고지 등)**

- ① 위원회의 장은 늦어도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반드시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원회의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은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두거나, 관계 전문가나 기관(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입법예고 실시 후 본 조항 관련 1건의 의견제출이 있었으며, 관련내용은 [참고1]과 같음.

- ▶ 안 제11조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의 작성·보관 의무를 명시하고,
- ▶ 안 제12조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게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 안 제13조는 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운영세칙에 관해 규정함.
- ▶ 안 제14조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 발굴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을 두었고, 안 제15조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명문화함.
-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관계 조문<sup>9)</sup>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 안 부칙 제1조에서는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되, 제2조에 「대구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와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를 명시함.

#### 9)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 운영 및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
2. 지방자치 및 분권 촉진을 위한 기관·단체 지원
3. 그밖에 지방분권 촉진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지방분권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지방분권 증진에 이바지한 사람
2. 지방분권 증진에 이바지한 법인·기관·단체



## ○ 검토 결과

-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촉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인정됨.
  
- ▶ 수도권과의 격차 확대와 인구감소, 일자리·정주 여건 취약, 인구 유출의 악순환 반복을 멈추고 대구만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추진하려면, 대구시와 대구정책연구원, 지역 소재 대학 및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방시대위원회 구축과 동시에 종전 기구 및 정책의 형식적인 명칭 변경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높은 정책 추진을 위한 각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의견 제출자 : 이○○	의견 제출일 : 2023. 8. 25.
제안 의견	<p><b>[기준]</b> 제10조(조사·연구) 시장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전문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p> <p><b>[수정안]</b> 제10조(조사·연구) ① 시장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으며, <u>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u> ②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u>제1항의 전문기관 또는</u>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p> <p><b>[사유]</b> (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운영) (사유) 상기 근거 규정에 의거하여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을 구성하고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해야 하나 현재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방시대지원단 구성 대신 전문직원으로 대신하고자 하나 업무부담이 크고 상호연계성이 우려되므로 중앙지원조직과의 업무 연계가 가능하고 기획·평가·NW 등의 전문역량을 보유한 전문기관을 별도 지정한다면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지원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p>
반영 결과	<p>○ 미반영</p> <p>- 본 조례안에는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해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제안한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시행령을 근거로 추진할 수 있으므로 조례에 중복하지 않기로 함.</p>

## 참고2

## 중전 협의회와 지방시대위원회 구성·기능 등 비교표

구분	지방분권협의회	지역혁신협의회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목적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지방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구성	의장 1인 포함 60인 이내 구성  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은 시장이 위촉> ⇒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계, 경제계, 정계 등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 협의회 의장 1명 포함 20명 이내 구성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1.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추천자 2.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 의장 추천자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 추천자 4. 대구광역시의회의 의원 5. 대구광역시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구성 당연직 위원(위원회 총괄 실국장) <시장이 위원 위촉> 1. 지방시대위원장 추천자 2. 대구광역시 구청장·군수 및 지방의회 의장 추천자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 추천자 4. 대구광역시의회의 의원 5.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기능 (심의 사항)	1.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지방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활동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지역 산업·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시책 운영 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 6.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 지역혁신협의회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1.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지역 산업·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 6.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 지방시대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참고3

## 표준 조례안 대비 비교표

표준 조례안	제출 조례안
<p><b>제2조(위원의 임기)</b>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 중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위원회 심의 수행 성과 및 회의 참석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p>	<p><b>제2조(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b> ①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p> <p>②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를 총괄하는 대구광역시 소속 실·국장으로 한다.</p> <p>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시대위원장이 추천한 사람</li> <li>2. 대구광역시 구청장·군수 및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li> <li>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li> <li>4. 대구광역시의회 의원</li> <li>5.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li> </ol> <p>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p>
<p><b>제3조(위원의 해촉)</b> 시·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li> <li>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li> <li>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p><b>제3조(위원의 임기)</b>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②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 수행 성과 및 회의 참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p>
<p><b>제4조(위원의 해촉)</b> 시·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li> <li>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li> <li>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p><b>제4조(위원의 해촉)</b>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li> <li>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li> <li>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p><b>제4조(회의)</b>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p> <p>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시·도 지방시대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b>제5조(위원장의 직무)</b>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b>제5조(간사)</b>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p> <p>②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한다.</p>	<p><b>제6조(회의)</b>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b>제6조(분과위원회)</b> ① 시·도지사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 제65조제8항에 따라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업무 분야별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위원 수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p> <p>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p>	<p><b>제7조(간사)</b>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p> <p>② 간사는 위원회 담당 과장으로 한다.</p>
<p><b>제6조(분과위원회)</b> ① 시·도지사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 제65조제8항에 따라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업무 분야별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위원 수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p> <p>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p>	<p><b>제8조(분과위원회)</b> ① 시장은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p>

표준 조례안	제출 조례안
<p>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p> <p>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p> <p>⑤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⑦ 분과위원회는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⑧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야별 분과위원회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p>	<p>지명한다.</p> <p>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분과위원장이 의장이 된다.</p> <p>⑤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b>제7조(〇〇시·도 지방시대지원단)</b> ① 시·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66조에 따라 〇〇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을 둔다.</p> <p>② 〇〇시·도 지방시대지원단에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p>	
<p><b>제8조(의견의 청취 등)</b>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b>제9조(의견의 청취 등)</b>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b>제9조(조사·연구)</b> ① 시·도지사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b>제10조(조사·연구)</b> 시장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p>
<p><b>제10조(회의록)</b> 시·도지사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p>	<p><b>제11조(회의록)</b>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p>
<p><b>제11조(수당 등)</b>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제12조(수당 등)</b>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b>제12조(운영세칙)</b>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p>	<p><b>제13조(운영세칙)</b>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p>
<p><b>제13조(시행규칙)</b>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b>제14조(경비의 지원)</b> ① 시장은 지역 특색에 맞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발굴 및 공론화를 위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p> <p><b>제15조(포상)</b> 시장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한 개인·법인·기관·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p>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가 주도하는 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아쉬운 점, 어떤 것이 있다고 봅니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분권위원회는 2004년도부터 운영되어 왔고, 균형위도 마찬가지임. 다만, 역할이 잘 없었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상향식 의사결정을 하는 것임. 또, 결정적인 차이는 실질적인 인센티브인 기회발전특구 등 인구 소멸 등을 막는 제도를 도입했다는 게 과거와 다른 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원을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시대지원단을 두어야 한다고 법령에 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시대지원단은 시·도에서 광역업무를 담당하는 곳임. 대구시의 경우, 광역협력 담당관이 있는데 지방시대위원회에 또 TF식의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판단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단에 대한 내용은 제외함.</li> <li>타 시·도도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저희처럼 별도의 지원 조직을 두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li> </ul>

## 5. 토론 요지

○ 없 음

## 6. 수정안 요지

○ 없 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